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정부와 세계은행(IBRD), 제2차 구조조정 차관 도입에 합의

- 차관 조건은 제1차 구조조정 차관(98. 3/27, 20억 달러) 조건과 유사함
 - 차관 내용: 20억 달러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
 - 차관 비용: 연간 이자율은 리보금리+0.75¹⁾, 기타 수수료 2.25%
 - 10월중 세계은행 이사회 승인을 얻어 10억 달러가 인출될 예정이며, 나머지 10억 달러는 정책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후에 결정할 예정
 - 금번 차관 20억 달러가 인출될 경우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한 자금중 70억 달러가 인출되는 것임

- 금융 분야 정책 합의사항
 - 7개 조건부 승인은행 처리: 국제적인 전문가를 정상화 이행계획서의 평가와 공적자금 지원 심사에 참여시킴
 - 13개 정상은행 처리: 6월말 기준 BIS 비율 8% 미달 은행은 조건부 승인은행과 유사한 절차를 적용
 - 공적자금 사용원칙: 경영정상화를 금감위가 승인한 경우, 부실은행을 정부가 인수하는 경우, 은행 청산의 경우, 신규 증자나 기존 지분의 감자의 경우, 기업부채 구조조정에 있어서 충분한 진전이 있는 은행의 경우 등
 - 금융 감독기구의 통합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 규정을 비은행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며,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
 - 채권시장 육성: 정부보증 채권의 국채전환을 포함한 채권시장 발전계획 수립

- 기업 구조조정 및 기업 지배구조 분야 정책 합의사항
 -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7월 IMF 정책의향서를 발표할 때 함께 발표했음. 즉,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 내용은 없음

1) 9월말 현재 리보금리(3개월물 기준)는 5.31%

- 기업 지배구조 개선: 이사에 대해 충실의무 부과,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상법에 규정,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, 주주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정책 권고안 작성, 파산 전문 법원 설치
-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: 99년 6월까지 독립회계기준 제정 기구 설치,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도입을 강구하고 관련 법령 초안 작성, 상장회사에 대해 2000년 1/4분기부터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
- 경쟁정책 강화: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 제한을 비롯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,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를 허용하도록 법개정
- 공기업 개혁 및 민영화: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관련법 개정, 인프라 부문의 개혁 및 민영화를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 수립

- 노동시장 및 사회안정망 분야 정책 합의사항

- 사회분야 정책의 통합과 조정 기능 강화: 현행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적인 실무위원회 설치, 4대 사회보험 통합의 효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
- 고용보험의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: 98년 10월부터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,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 노동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
- 기타: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제한, 한시적 생활보호자 확대, 의료보험제도 개선, 연금제도 개편 등

- (정책 합의사항 특징) 금번 합의사항은 새로운 것이 거의 없으며, 대기업그룹 사업교환(빅딜)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음

- 금번의 정책 프로그램은 지난 2월 27일에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재구성한 것임
- 정책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이고 계획중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
- 세계은행 차관과 정부의 빅딜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은 없음
→ 그간 빅딜에 대한 정부의 세제·금융 지원에 대해서 세계은행이 이를 반대하고 추가 차관과 연계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나, 금번 발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음

(정 반 석 bsjoung@hri.co.kr ☎724-4045)